

野, 與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정치적 뒷거래”

정점식 “헌정사 수처로 남을 것”

주진우 “李대통령 재판 지우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법원의 공소기각이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의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어난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 재판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이미 폐지 결론을 정해놓은 민주당이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청위로 전락시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종’,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압해 될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로 결국 판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 재의요구를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만만해졌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물결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국내·외 66개팀 역대급 라인업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2026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오는 31일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2026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재부팅(RE:BOOT)’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더욱 새롭게 확장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올해는 영국 트림함의 전설 매시브 어택(MASSIVE ATTACK), 미국 얼터너티브 록의 상징 픽시



물 반 사람 반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30일 오후 경남 김해시 신동동 롯데리조트에서 열리는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필뉴스

담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만만해졌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물결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던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라는 독소조항을 법사위 소위 심의 심사에 돌린 게 위헌”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연방’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했 뿐 아니라 물리대지판, 왜 본회의 처리를 코앞에 두고 (진행)중인 사건을 재외하는 정치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관련)법 시행 후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피고인측은 기존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기각을 주장할 명분의 근거를 얻게 된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건은 부실·지연 수사에 방치하고 대통령에게 는 본안 판단을 피할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서 “대통령은 재판에서 빠져나가는 황당무계한 사법 무력화가 현실이 될 위기”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유죄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히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수립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제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재외하는 정국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통해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판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으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사법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만 공소기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감사의 공소권까지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이면서 현재 대법원과 기화순 상태에서 중지된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만 기자 joy@sinimilbo.co.kr

鄭 36.9% 金 28% 宋 9.2%

(정창래) (김민석) (송경림)

민주당 지지층서는 金 우세

미디어토마토 조사

최고위원 선호도 최민희 1위

뒤이어 박선원·서미화·김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30일 공개된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정창래 후보 36.9%, 김민석 후보 28.0%, 송경림 후보 9.2%의 ‘없음’ 21.8%·‘잘 모름’ 4.1%로 집계됐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를 제친 정 후보는 무당층에서도 25.0% 지지를 보 김 후보(16.8%)를 앞섰다.(송 후보 7.1%)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도 정 후보(38.7%)가 김 후보(10.1%)와 송 후보(5.9%)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 44.9%, 정 후보 38.9%, 송 후보 11.2% 순이었다.

특히 민주당 경선들이 적용되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는 김 후보 39.0%, 정 후보 36.1%, 송 후보 10.3%로 각각

집계됐다.

새로 도입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12.9%)와 정 후보(9.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송 후보 지지층 중 57.9%는 김 후보를, 36.9%는 정 후보를 각각 1순위로 선택했다.

최고위원 선호도 조사에서는 최민희 후보 15.0%, 박선원 후보 14.7%, 서미화 후보 6.8%, 김용 후보 6.0%, 이성운 후보 5.4%, 한민수 후보 4.7%, 임미애 후보 4.6%, 김경호 후보 2.6%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박선원 후보(23.7%)와 최민희 후보(23.3%)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용(10.5%), 서미화(9.8%), 한민수(5.5%), 임미애(4.5%), 이성운(4.2%), 김경호(1.6%) 등 후보들이 뒤를 이었다.

무선 ARS(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영만 기자 joy@sinimilbo.co.kr

경기도, 상속 취득세 탈루 세원 85억 추정

2156명 신고 누락 적발

세원조사·홍보 병행키로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원을 찾아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회조사’는 지난 5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482명(총 5만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원을 추정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법정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

으로 오인하는 경우였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법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정 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했고, 조사에 적발돼 5800만원이 추정됐다.

도 관계자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재정세 기자 cjs7749@sinimilbo.co.kr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